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Weekly Economy Briefing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민주정책연구원

Weekly Economy Briefing | 15-6호 | 2015년 9월 3일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

〈9월 첫째주 경제 브리핑(8.31-9.4)〉

[거시] 금통위,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
[산업] 7월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생산 하락에도 서비스업 생산 상승 등으로 전산업 생산 0.5% 증가
[산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 실적 향상, 관련 시장 확대 가능성 높아짐
[지역경제] 국토부,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 발표
[지역경제] 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 [거시] 금통위,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

○ 9.1. 금융통화위원회, 2015년도 제15차(8월13일) 의사록 공개
○ 주요 내용

1. 달러화 강세의 영향

- 최근 미 달러화가 2003년 이후 최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강세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낫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향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정에서 달러화 강세 기조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음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들로부터 자본이 유출되고 그 영향으로 이들 국가의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신흥국 전반에서 자본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하에서 신흥국의 달러화 표시 채무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보면 향후 달러강세가 심화될 경우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2. 선진국(미국)과 신흥국(한국) 간의 경기 동조화 약화

- 지난 두 차례 미국의 금리 인상기(경기 회복기)에 한국은 미국과 경기가 동조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미국과의 경기 동조화가 약화되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와의 동

조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흥국 내에서도 경기의 비동조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신흥국 경기가 다소 비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 경기의 회복이 세계수요의 확대로 충분히 파급되는 데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지만,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세계경제의 다각화 추세를 감안하면 동조화 정도는 약화될 것임.

→ 지난 6월 BIS 연차보고서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동조화 약화로 인해 취약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로 전이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함

→ 향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국가 별로 차별화되고 통화정책의 국제공조 가능성이 낮아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

3. 유가 하락의 영향

- 최근의 국제유가 추가 하락은 1)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 전망, 2) OPEC의 증산기조 유지, 3) 셰일오일(shale oil) 감산가능성 저하, 4)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해 왔는데, 1) 저유가가 자원수출국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약할 수 있음 2) 디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질 경우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4. 실업 증가

- 작년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시적 효과가 소멸된 데다가 금년 2/4분기 중 가뭄, 메르스 사태, 금융권의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적정수준을 하회함
- 청년층 취업문제에는 경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

→ 청년층에서 구직단념자, 잠재구직자, 시간관련 추가취업자능자들이 계속 크게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축적 및 잠재성장률 저하, 출산율 하락 및 노령화 가속화, 소득양극화 등 분배문제의 악화 및 복지부담 증대, 경기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을 우리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함

→ 비정규직·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의 구조 및 질적 변화가 경제성장이나 물가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통화정책 판단 시 참고하여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지방 주택가격 상승세

- 최근 대구, 부산 등 일부지방의 주택가격이 경제여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과열양상을 보임
- 이들 지역이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상승률이 수도권보다 낮았던 데다가 2)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 개발 호재가 가세했다는 시각이 있음

→ 하지만, 1) 최근 지방 주택가격 수준이 장기 추세치를 크게 상회하고, 2)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빠르고, 3) 지방의 가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비은행금융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 주택시장의 리스크 수준에 대해서는 더욱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6.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 개인사업자대출, 주택담보대출, 법인 기업대출 등이 상당히 늘어나고, 본원통화 등 각종

통화지표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제 유동성의 행방을 보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된 반면 주식시장이나 투자 등 실물부문에는 유입된 자금은 많지 않은 것 같음

→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어느 부문으로 흐르고 있는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7.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효과와 우려

- 정부가 7월22일 발표한 관리방안은 1)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전환 촉진, 2) 금융기관 자율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 개선, 3) 제2금융권 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인 개선을 한다는 것임

→ 그러나 내년도에 제도를 시행을 함에 따라 1) 하반기에 거치식 대출 등 대출 선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 2)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의무비율의 상향 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가계부채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8. 기업부채의 증가

-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기업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채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상당히 유의하여야 함
- 업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회사채 A등급 이하, 특히 BBB등급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장기채시장의 유동성 및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비우량 회사채금리가 급등할 위험이 있음
- 현재 우리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업부실이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는 신중히 대비해야 되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임

→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적인 또는 사전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크본드 등 부실채권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함의 및 전망

- 대내적으로 실업 증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동시 증가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달러화 강세 지속 속에 미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목전에 두고 그 시기만을 조율 중인 상태임
- 금통위는 한국 경제의 활력 상실 원인이 구조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 및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바, 9월 12일 열리는 금통위에서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의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가 단행된 상황에서 미 연준의 9월 정책금리 인상이 어려워 보일 경우 12월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임

□ [산업] 7월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생산 하락에도 서비스업 생산 상승 등으로 전산업 생산 0.5% 증가

○ 8.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5년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주요 내용

- 7월 전산업생산*은 6월 대비 0.5%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것임

  *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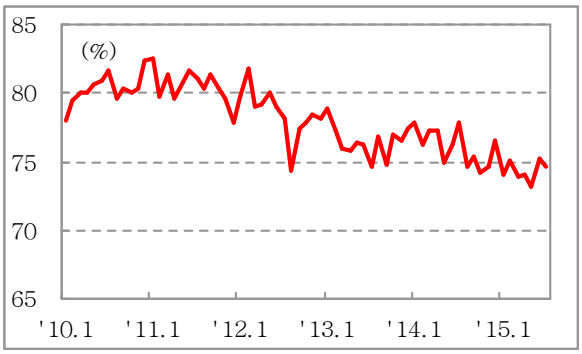
-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0.5%), 공공행정(△4.0%)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1.7%)과 건설업(0.8%)이 증가하였음

  * 全산업생산(전월비,%): '15.3월 △0.5% → 4월 △0.5% → 5월 △0.6% → 6월 0.6% → 7월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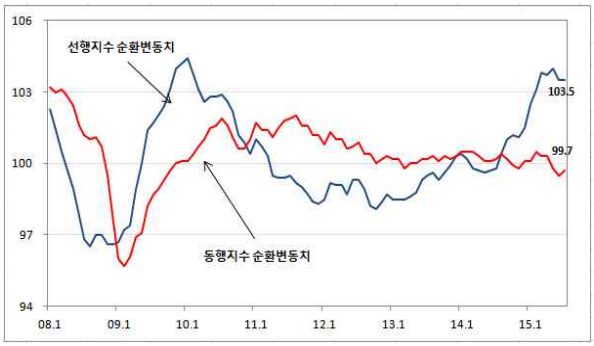
  <전년동월비> 2.0% 0.7% 0.1% 1.4% 0.2%

- 6월 상승했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월 74.7%로 다시 하락했으며, 동행종합지수 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변화 없음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추이



○ 함의 및 전망

- 7월 전산업생산지수가 6월에 이어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4.7%로 하락하여 여전히 70%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 점은 우려가 됨
- 2014년 중반이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했음에도 동행지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는 어려움
-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산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 실적 향상, 관련 시장 확대 가능성 높아짐

○ 8.2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 대폭개선」

○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도 의무이행률은 78.1%로 전년대비 대폭 개선(10.9%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 RPS 의무이행률 추이 : ('12) 64.7% → ('13) 67.2% → ('14) 78.1%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RPS 공급의무자 - 2015년 현재 총 17개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 현재 공급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있음

- REC 거래와 관련하여 그동안 태양광 발전 육성을 위해 운영되었던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2015년 말 종료되어 2016년부터는 태양광-비태양광 통합 시장을 운영하기로 함

○ 함의 및 전망

- 이 제도는 공급의무자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유인하는 효과 역시 지니고 있음
-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RPS 이행실적 및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 과정에서 공급의무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소규모 업체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지원을 유지하기 바람

□ [지역경제] 국토부,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 발표

○ 8.31. '다양해지는 '기업형 임대'... 빌라도 나온다' (한국경제) 외 6개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으로는, 도심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의 경우 최소개발면적을 기존의 절반인 5,0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본금 절반 이상을 출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촉진지구 내 부지의 50% 확보로 그 외의 땅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10만㎡ 이하 규모는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 뉴스테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일반분양 수준의 품질로 지어진 중산층용 임대아파트로, 19세 이상 국문 모두 청양통장 없이 신청 가능함
- 2018년에 2천 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뉴스테이'(인천 남구 도화지구, 보증금 5,000~6,500만원 & 월세 43~55만원)가 지난 2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30일 오전까지 5만 명 이상 방문하였음

<그림> 수도권 및 전국 뉴스테이 사업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 9.2. 보도자료 인용)

- 주변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과 초기 임대료가 비슷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임대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되고, 8년 간 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거주 안전성이 높음
- 공공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깡통전세‘의 위험이 적고, 3개원 전 통보로 중개수수료 지불 등이 없으며, 육아·이사·청소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임

○ 함의 및 전망

- 최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거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중산층에게 국한한 대안이며, 하위계층에서는 이용이 거의 불가함
- 또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기간 8년 후 변화에 대해 대책이 전무함

□ [지역경제] 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 9.3. ‘99m2집 2억 빌려 원룸 8개로 개조 땐 월 순익 54만원’ (중앙일보) 외 관련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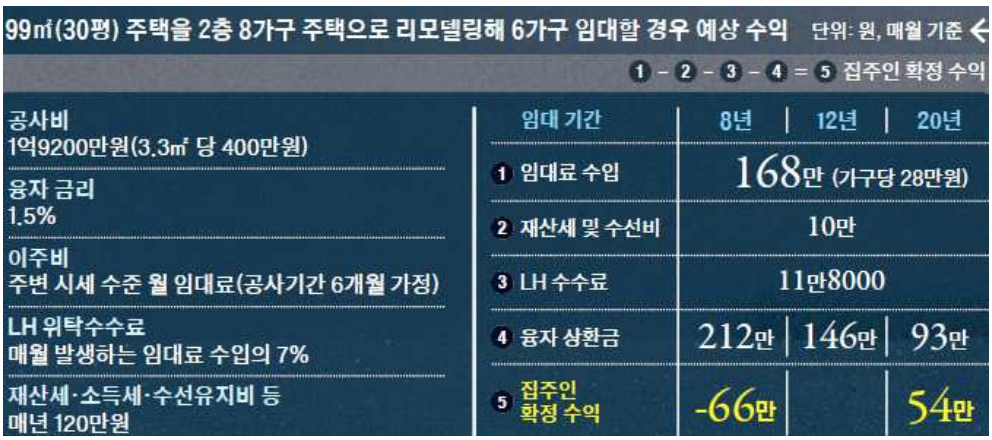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9월 2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함

항목	주요 대책	내용
주거 지원 강화	LH의 리모델링 매입 임대	연간 2000가구를 대학생과 노인층에 우선 공급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도시주택기금이 2억원까지(금리 1.5%) 자금을 지원, 150채를 리모델링해 1000가구 공급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	2000가구를 시세의 30%에 공급
	대학생 전세임대 확대	3000가구→5000가구
	공공실버주택 공급	2016~2017년 매년 650가구
	행복주택의 대학생 공급 확대	2016년 1500가구 등 2017년까지 5000가구를 우선 배정
	대학 밀집 지역에 행복기숙사 신축	매년 10곳, 2000가구 공급(2017년까지)
뉴스테이 공급 확대	올해 1만8000가구 인·허가, 6000가구 입주자 모집	수원 권선, 화성 동탄2지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
	2016년 인·허가 물량 2만 가구로 확대	서울 문래동 롯데푸드 부지와 광주광역시 누문지구 등 활용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CEO 조합장 제도 도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도 조합장, 감사, 이사가 될 수 있음
	검인 동의서 제도 도입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 시엔 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해야
	재건축 사업 동의 요건 완화	동별 소유자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중앙일보, 9.3. 기사내용 일부)

<그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 개요



<그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예상 수익 계산

(국토교통부 9.2.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및 중앙일보 9.3 기사내용 인용)

-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통해 LH 등 공공사업자의 2천호 공급 및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으로 1천호 공급을 계획하고, 공공실버주택 공급으로 독거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주택 및 행복기숙사 공급을 통해 대학생 주거를 지원하며, 뉴스테이 본격화와 더불어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임
-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택분할을 계획

○ 함의 및 전망

- 새로운 주택신축이 아닌 기존 민간주택 활용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로 이미 수요가 충분한 도시지역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약 2억 원에 가까운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하여 월 54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모델은 선호될 여지가 적음.
-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발표되었으나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 내용이 집중되어있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전세난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낮음